

한국 사회과학과 창비 30년

민중, 민중 그리고 세계

김동춘

1. 들어가는 말

『창비』 30년! 이러한 글을 쓰는 지금 필자는 남다른 감회를 갖는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필자의 세대에게 2,30대 청년 시절은 바로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쳤던 지난 20년간의 세월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에 눈을 뜬 연령이 되었던 70년대 말 『창비』는 본격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고, 『창비』는 우리의 젊은 시절의 고뇌와 사상적 방황, 개개인의 굴곡 많은 삶의 이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지식사회 전반이 숨죽이던 70년대말 『창비』는 암울한 현실에 짓눌려 있던 우리 뜻내기 지성인들의 지적인 욕망을 해소해주는 청량제이자 숨구멍이었다. 강의실에서 채워지지 않았던 우리의 지적인 갈증은 『씨울의 소리』 『대화』 등과 청계천 헌책방에 쌓여 있던 60년대의 빛바랜 『사상계』 『다리』 등의 잡지, 진흥문화사나 서광사에서 영인한 루카치

金東權 서울대지역종합연구소 연구원. 저서로 『한국사회 노동자 연구』가 있으며, 본지 82호(93년 겨울)에 논문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 맑스주의이론의 성격변화와 한국 사회과학」을 기고함.

(G. Lukács), 돕(M. Dobb), 프레이리(P. Freire), 스위지(P. Sweezy), 헤겔(Hegel) 등의 해적판 영문서적들이나 지금 생각하면 매우 조야한 이론가들에 불과했다고 생각되는 일본의 강좌파의 철학·정치경제학·경제사 관련 저작들이 채워주었다. 그 중에서도 ‘갓 구워낸 따끈 따끈한’ 『창비』를 펴는 것은 가장 흥분되는 일이었던 것 같다. 『창비』의 소설·시·문학평론 들도 사회과학 논문 못지않게 당시의 젊은이들을 사회문제에 눈뜨게 하는 계몽적인 역할을 수행했는데, 당시의 조건에서 『창비』를 읽는 행위 자체가 부정의한 시대의 흐름에 저항하는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뿌듯함을 갖도록 해주기도 했다. “이러한 글을 써도 되는가” 하는 우려와 “정말 속이 시원하다”는 통쾌함이 새삼 기억나고, 당시로서는 대학 강의실보다도 더욱 권위있고 실속있는 아카데미인 땃국물 줄줄 흐르는 가난한 대학생들의 하숙방과 자취방에서는 최근호 『창비』가 언제나 논란거리가 되었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이들 중에서도 리영희·송건호 선생의 글들과 1977년 가을호의 좌담 「분단시대의 민족문화」에서 많은 충격과 감명을 받았으며 개안(開眼)의 희열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들은 당시의 시대 고민을 집약한 것이었기 때문에 비록 우회적으로 표현되는 현실비판이었을지언정 행간에 깔린 저항과 비판의 목소리를 충분히 알아채고 공명할 수 있었다. 60년대 공업화 이후 점점 심화되는 당시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모순들이나 냉전적 세계질서와 우리의 민족분단의 상호관련성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의 어느 선생으로부터도, 대학의 어느 강좌에서도 별로 듣지 못한 새롭고 놀라운 것이었다.

이 글을 쓰기 위해 필자는 대학 기숙사, 자취방과 하숙방, 신집 살림집에서 현재의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수십번 짐짜기 고역을 치르면서도 여태껏 끌고다닌 손때 묻은 70년대말 수년간의 『창비』를 다시 끄집어냈고, 필자가 그어놓은 밑줄과 여백의 낙서 들을 감회어린 심정으로 읽어보았다. 70년대 중반 이후 20여년 간의 『창비』의 관련 논문, 좌담 등을 다시 읽으면서, 필자는 그동안 필자 자신의 관심과 문제의식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를 점검해보는 또다른 즐거움을 갖게 되었으며, 작금의 지식사회나 사회과학계의 황폐화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다시 찾을 수 있었다. 어쨌든 여러모로 『창비』로부터 이렇게 많은 빛을 지고 있는 필자가 이러한 보잘것없는 글로써나마 『창비』 30년을 기록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대단히 영광된 일임에 틀림없고 이러한 기회를 갖게 해준 『창비』 편집진에 감사드리고 싶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지성은 서구의 200년의 역사를 축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기간 동안 한국 사회과학은 근대(modern)/반근대(anti-modern) 혹은 정통(orthodoxy)과 신(neo), 후기(post)를 모두 거쳤기 때문이다.¹⁾ 그러나 지금까지의 주요 이슈 혹은 사회적 과제와 관련해보면 사회과학은 한국사회 혹은 한국 자본주의의 성격, 민족 혹은 분단 현실이 그것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해서 한국사회변혁을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지에 주로 관심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과제에 대해 『창비』는 어떻게 응답해왔으며 어떤 입장을 취해왔는지, 무엇을 밝혔으며 어떤 점을 과제로 남겨두고 있는지에 대해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문예지로서의 성격이 강했던²⁾ 70년대 초반 이전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면 『창비』의 사회과학 지면 역시 바로 이러한 사안을 쟁점화하는 작업을 주도했으며 집중적으로 지면을 할애했기 때문에 지난 30년간의 한국 사회과학의 고민과 『창비』의 문제의식은 대체로 일치한다.

2. 개관: 한국 사회과학의 과제의 변화와 『창비』의 대응

(1) 비판의 시기: 1960, 70년대

60, 70년대 한국의 사회과학에 대해 생각해보니 우리 근대사에서 사회과학이 과연 존재했는가, 존재했다면 언제부터였는가, 한국 사회과

1) Jeffery Alexander, "Modern, Anti, Post and Neo," *New Left Review* 214, 1995.

2) 1976년 봄호의 '10주년 기념좌담'은 모두 문인들만 참석하였고, 그간의 성과를 정리하면서 문학 외의 것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학이 대상으로 하는 ‘사회’(society)란 무엇이었는데 그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새삼 제기된다. 통상 사회과학으로 지칭되는 각 분과학문 영역이 근본적으로는 결국 기존의 자유주의 지배질서의 요청 속에서 구분된 것이며, 그것은 구체적으로 근대 대학제도를 바탕으로 실천·재생산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여기서의 논의의 폭은 훨씬 좁아져버린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회’에 대한 설명과 해석의 작업으로서 넓은 의미의 사회과학 개념을 우선 전제해야겠다.

그러나 기존의 정치경제질서, 이해대립과 정치적 갈등을 직·간접으로 반영하는 사회과학은 제아무리 가치자유(value-free)의 입장을 공표하여도 결국은 기존질서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현실개입의 스펙트럼 안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기인식을 분명히하는 비판적인 사회과학이 주로 여기서의 관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비판적 사회과학은 어떤 방식으로든 기존 질서에 대한 ‘비판’이자 과학적 ‘설명’이며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대안’으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맑스(Marx)의 지적인 실천을 보는 관점 및 그것에 대한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의 개념을 둘러싼 논의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회과학의 지향점을 비판에 둘 것인가, 과학적 설명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방법론적인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다. ‘비판’이 시급한 시대에 ‘과학’의 신화는 비판을 회피하기 위한 알리바이일 수 있다. 그리고 과학적인 작업 자체가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청사진보다는 훨씬 더 충실한 대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 세 측면의 의의와 위상을 선형적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겠다. 따라서 60, 70년대 이후 이 세 과제가 중첩되면서도 약간씩 비중을 달리하며 지속적으로 요청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창비』가 창간되던 60년대말에서 70년대말에 이르는 기간은 우리 사회에 대한 과학적 분석보다는 선진 이론의 소개, 사회일반을 향한 계몽적 작업 및 부정의한 사회에 대한 비판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는 우선 지식 축적의 절대량이 제한되어 있었으며 냉전적 질서와 군사정권이 한국사회에 대한 과학적 분석 자체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국가이데올로기로 내재화된 냉

전적 지배질서는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의 장점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제1세계의 '선택된 소수'(chosen few)로서 한국의 유리한 위치 및 경제성장의 성과를 일방적으로 칭찬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과학적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제한하였다. 따라서 그와같은 조건에서는 사회과학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보통의 지식인들도 정치사회 상황과 직·간접으로 부딪치지 않고서는 온전히 지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없었고, 설사 그러한 조건을 의식하지 않는 지적인 작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현실에 대한 해석이라는 사회과학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회피했기 때문에 별다른 '사회적'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³⁾

결국 시·소설·문학평론 외의 『창비』 지면은 현실을 직접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은유와 비유 혹은 과거의 사실을 빗대어 현실을 말할 수 있는 종교·역사·국제정세에 대한 평론들로 주로 채워졌다. 따라서 사회과학 평론이 본격적으로 실리기 시작한 70년대 초반 이후에도 한국정치나 사회에 대한 분석은 전무하였고 주로 국제사회의 동향, 각 사회과학 분과학문의 흐름에 대한 소개 및 비판적 문제제기 논문들이 지면을 채우고 있다. 한편으로 이 시기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사회과학도들이 종교와 문학에 관심을 갖는 사람으로 자처하거나 아예 역사학자로 변신함으로써 생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 냉전이데올로기라는 '우상'을 파괴하는 데 있어서 『창비』에 실린 일련의 평론들이 수행한 역할은 지대하다고 할 것이다.⁴⁾ 그중에서도 베트남과 중국을 빗대어 한국인의 제3세계적 자기인식에 눈을 뜨는 데 크게 기여한 리영희교수의 글들과, 냉전적 역사인식을 뒤흔든 강만길·송건호 선생의 글, 수출위주의 대외의존적 경제성장의 모순들을 폭로하면서 자립적 경제구조의 구축을 부르짖은 박현채·신용하·이청산·유인호·조용범 교수 등의 글은 그 자체가 가장 직접적인 현실비판이었으며, 한국의 지배질서를 지탱

3) 『창비』 창간호의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에서 백낙청교수는 문학인의 자세를 논하면서 이러한 과제를 지적하고 있다.

4) “구성분자에게 절대적으로 복종을 요구하는 우상”과의 싸움은 바로 리영희교수가 그렇게 강조하던 당시의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과업이었다. 리영희, 「현대 중국연구의 성과와 허점」(『창비』 76년 가을).

해주는 정신적 토대를 근원적으로 문제삼는 것이었다. 당시 한국의 청년들이 4·19 이후 타성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단순한 정권비판 의식을 넘어서서 민중의 입장에서 사고하면서 냉전·분단 질서에 의문을 표시하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identity)과 저항의 의미를 통일민족국가를 지향해온 한국 근대민족운동의 흐름과 제3세계의 민중적 민족주의의 위상 속에서 재설정하게 된 것도 『창비』라는 큰 ‘배후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당시에도 제도권 사회과학은 이러한 흐름과는 거리를 갖고 있었다. 70년대의 시점은 사회과학의 공백기, 지식 축적의 빈곤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식민지 시기에 훈련받은 사회과학자들이 해방 8년의 정치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거의 사라진 뒤에, 미국에서 교육받은 젊은 학자들이 점차 학계의 주류를 형성해갔지만, 이들은 아직 한국의 현실을 직접 연구대상으로 삼아 본격적으로 연구작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5,60년대 미국의 사회과학적 흐름을 열심히 소개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70년대 중반 이전의 『창비』의 사회과학 지면이 쉘르(J. P. Sartre), 밀즈(C. W. Mills), 마르쿠제(H. Marcuse) 등 서구의 신좌파나 급진적 자유주의자들의 논문으로 채워진 사실이나, 70년대 말의 지면에서도 미국과 유럽의 최신 사회이론으로 훈련된 사회과학자들은 거의 『창비』의 필자로 기용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2) 과학의 시기: 1980년대 중·후반

80년대 중반 들어 한국 사회과학은 ‘과학의 시대’ 즉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당시의 과학성이란 곧 맑스의 과학, 즉 계급적 입장과 ‘당파성의 원칙’에 얼마나 충실한가 하는 점으로 집약되었다. 전시기의 모든 지적인 업적이나 지식인의 행태들은 비과학적·비변혁적인 것으로 비판받았으며, 애매한 우회 경로를 걸어온 것으로 매도되었다.⁵⁾ 한편 80년대는 이러한 과학주의에 맞서 놀랍게도

5)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병천·윤소영, 「전후 한국 경제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정치경

옛날 독립투사들에게서 들어보았음직한 ‘애국’과 ‘민족대단결’의 외침이 나타난 시기이기도 하다. 새롭게 등장한 ‘과학의 사도’와 ‘애국투사’ 들을 보면서 ‘민중’과 ‘민족’이라는 개념을 얻는 것만도 엄청난 성과라고 느끼고 있었던 70년대 이전의 지식인들은 대체로 놀라거나 주눅든 상태에서 이러한 흐름을 지켜보았다. 이 시기는 운동가나 연구자들 간에 한국사회의 성격과 변혁운동의 진로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된 시기였다. 따라서 맑스의 저작에 대한 이해, 사회를 접근하는 방법론의 차이, 과거의 운동사에 대한 해석, 한국자본주의 발전단계에 대한 시각들이 본격적으로 충돌하여 ‘정통’과 ‘사이비’의 열병이 젊은이들을 사로잡았다.

‘과학적 인식’을 향한 문제제기는 그 자체로는 일면의 정당성을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70년대 한국 사회과학을 사실상 대표하던 경제학 분야의 한국경제에 관한 평론들이 대부분은 박정권의 성장정책에 대한 근본적 비판과 대안제시로 나아가지 못하고, 붕괴의 가능성을 점치거나 자주적인 경제개발, 경제적 이중구조의 탈피, 성장과 분배의 조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중소기업의 구조개편, 내포적인 경제발전 전략을 촉구하는 등 다소 도덕주의적인 비판의 수준에서 별로 진전되지 못했으며,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과 한국사회의 고도 자본주의화에 대한 과학적 분석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⁶⁾ 따라서 80년대에 들어 과거와 같은 방식의 도덕적·민족주의적 비판을 지양하고 한국의 자본주의화를 본격적으로 인정하되 ‘당파성’을 견지하면서 그 극복의 과학적 대안을 정립하지는 제안에 사회과학도들이 비이성적일 정도로 집착했던 경험은 한국 사회과학의 발전과정에서 한번은 반드시 거쳤어야 할 일이었다고도 생각된다.

이 시기 『창비』는 한국사회구성체 논쟁에 불을 당기고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부정기간행물 『창작과비평』(1985)에

제학의 관점에서], 학술단체연합심포지움준비위원회, 『80년대 인문사회과학의 현단계와 전망』, 역사비평사 1988.

6) 박현채의 「한국노동운동의 상황과 당면과제」(『창비』 78년 봄) 등 그의 일련의 논문들은 이러한 흐름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다.

실린 한국사회구성체론에 관한 박헌채·이대근 두 경제학자의 논문, 모든 쟁점이 전부 제기되었던 『창비 1987』의 긴 좌담, 한국사회 계급론에 관한 연속기획, 맑스주의 역사관을 둘러싼 논쟁, 박헌채선생의 일련의 논문들, 백낙청교수의 분단체제론에 대한 초보적인 문제제기 등에서 사회구성체론은 영글어갔다. 이 시기 『창비』는 독자적인 입장을 세우기보다는 다양한 입장을 수용하여 그것을 뜨거운 논쟁의 현장에서 한발 물러서 있는 많은 지식인이나 학생들에게 제공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0년대는 팜플렛의 시대였다. 레닌(Lenin)의 논리와 화법을 구사하는 각종 팜플렛 속에는 70년대식 열정이 담긴 현실 비판이나 차갑고 신중한 분석보다는 동료 운동가들의 현실분석과 운동노선에 대한 가혹한 비판과 자신의 입론에 대한 무리한 정당화만이 돋보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사회과학이나 운동론이 ‘이성’과 ‘과학’의 저 꼭지점과 때늦게 부활한 민족해방과 ‘공동체’ 논리의 저 반대편 꼭지점으로 떨어져 서로 화해할 수 없을 정도로 대립하고 있을 때, 『창비』는 그 중간 어디에 약간 불편한 자세로 서서 이들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70년대와는 달리 ‘운동’이 시장성을 획득하여 본격적으로 한국사회를 연구하는 많은 매체들이 발행되고 변혁론 논쟁이 가열되면서 『창비』에 대한 사회과학도나 운동가들의 의존도는 점점 낮아졌다.

(3) 대안모색의 시기: 90년 이후 현재

전세계의 모든 지식인들에게 1989년 소련·동구 사회주의의 붕괴, 독일통일 등의 사건은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최대의 세계사적 충격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전세계의 사상적 흐름을 주도하던 유럽에서 1968년 5월혁명 이후 지적·사상적 분화가 어떻게 전개되어왔는지를 숙고할 여유를 갖지 못하고 오로지 국내 문제의 해결에만 사활을 걸고 있던 한국 지식인들에게 그 충격은 더욱 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87,88년 대선과 총선에서 민간정부 수립이나 ‘운동의 정치적

교두보 확보'에 사실상 좌절을 겪고, 이후 사회 전반의 보수화 물결 속에서 사회변혁을 향한 열기와 관심이 급격히 퇴조하면서 비판적 지식인들은 더욱 깊은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다. 90년대 들어서 이제 비판적 사회과학은 물론 사회과학 일반의 시장이 급격히 축소되었으며 문화영역에서도 영화·비디오·만화·광고 등 시청각 매체가 소설과 논문을 대신하여 젊은이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사회구성체논쟁은 이제 '역사'가 되었다.

『창비』는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끈질기게 한국사회의 변화 전망 및 사회운동의 대안을 모색하였는데 주로 좌담이나 지상토론, 외국 연구자들의 번역논문 등을 통해 그러한 작업을 추진하였다. 대체로 1990년 이전까지의 『창비』 측의 대안모색은 민족·민중적 입장에 바탕을 둔 한국사회변혁과 부문운동의 발전 전망의 모색이 주류를 이룬다면, 그후의 시기에는 현존사회주의 붕괴 이후의 세계질서, 동아시아 질서 및 과거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전통적 패러다임의 문제의식을 보존하면서 그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새로운 사회 혹은 새로운 운동노선을 향한 대안모색 작업은 현존사회주의 붕괴와 맑스주의 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신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s)을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 그리고 사회주의 붕괴 이후의 세계화 및 근대 혹은 탈근대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 등으로 표현되었다. 맑스주의 위기에 대해서는 90년의 좌담과 쿠친스키(J. Kuczynski) 등과의 대담, 92년 봄 각계인사들의 새로운 사상지표의 모색, 매카니(J. McCarney), 까갈리쯔끼(B. Kagarlitsky), 월러스틴(I. Wallerstein), 앤더슨(P. Anderson), 블랙번(R. Blackburn), 페트라스(J. Petras) 등의 번역논문 등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운동의 주체와 과제에 대해서는 노동운동에 관한 논문 그리고 생태주의운동·여성운동·평화운동·시민운동·신사회운동 등에 대한 좌담과 논문들을 통해 우리 사회운동의 핵심 쟁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제화·세계화에 대해서도 1994년의 토론과 논문 등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대체로 『창비』는 현존사회주의 붕괴 이후 현실의 세를 등에 업은 친

자본주의적 주장 혹은 신판 근대화론적 대안이나 포스트모더니즘론을 부정적으로 보며, 이 점에서 한국의 70년대 이래의 구운동진영 일반이나 비판적 지식인들의 시각(즉 민족민주주의 혹은 반자본주의 대안)을 어느정도 대표하고 있다. 특히 80년말 이래 대립되고 있는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사회주의, 중진(발전된)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면 미래의 사회주의?)의 입장에 맞서서 분단체제/민족민주주의(전세계적 차원에서의 근대극복, 사회주의?)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⁷⁾

3. 한국 사회과학의 과제와 『창비』

(1) 한국사회의 성격 규명

— 분단의 사회과학적 자리매김을 중심으로

한국자본주의 혹은 한국사회구성체는 대단히 복잡하다. 따라서 한국자본주의의 성격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의 추상을 거쳐야 한다. 대체로 민족국가간의 갈등이라는 변수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영향을 끼치던 상황에서 자본주의 발전을 겪은 영국 등 극소수 선진자본주의 사회의 성격에 대한 유형화를 1단계의 추상이라고 한다면, 19세기의 독일을 필두로 러시아 등 후발자본주의 국가와 제3세계 나라들의 사회성격은 순수자본주의 모델에다 제국주의 침략과 민족간의 갈등을 포함하는 2단계의 추상을 거쳐야 한다. 1945년 이후 제3세계 국가의 경우 순수자본주의+식민주주의적·경제정치적 지배에다 진영간의 이념적인 갈등, 군사정치적 관계라는 변수를 고려하는 3단계의 추상을 거쳐야 한다고 할 때, 한국의 경우는 세계적인 냉전질서의 최전선에 위치하여 국민국가가 곧 분단국가가 됨으로써 4단계의 추상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7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분단하에서 공업

7) 이들 입장의 대립에 대해서는 1987, 1989, 1990, 1993, 1995년의 관련 좌담들과 1987년 이후의 백낙청교수의 논문들을 참고하기 바람.

화가 진척되고 자본주의적 사회관계가 착근함으로써 한국은 더욱 복잡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회가 되었다.⁸⁾

그러나 한국의 사회과학계는 국제정치의 영향을 덜 받거나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재생산기반을 가진 선진자본주의의 토양 속에서 발전되어 온 서구 사회과학 이론에 전적으로 의존해왔기 때문에 민족·국가·군사·역사·문화 등의 변수들을 은연중 고려에서 제외하는 경향이 있다. 이 점을 의식하여 『창비』의 사회과학 지면은 한국 사회과학자들이 민족문제나 분단문제, 동아시아지역 국가간의 역학관계를 등한시해온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해왔으며, 단순한 불만 표출을 넘어서 우리의 조건 속에서 '국민'과 '민족'이 엄격히 구분된다는 점을 지적하기 시작하였고 민족과 계급, 민족과 세계의 상호관련성을 체계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70년대 중반 이후 80년까지는 '분단시대'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이루어졌고 80년대 후반 이후는 '분단체제'라는 개념을 근거로 하였다. 후반기의 경우 『창비』를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백낙청교수의 역할이 매우 두드러진다.

70년대 중반 이전에는 실학파나 근대민중운동 중심의 역사연구, 참여지향의 문학작품을 통해 넓은 의미에서는 비판적이고 참여적인 지성을 대변하는 잡지로 발전해오던 『창비』가 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하여 '제3세계' '분단국가'라는 자기정체성을 바탕으로 분단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자신의 노선으로 정립해나간다. 따라서 이 시기 이후의 주요 사회과학 논문이나 평론들은 대체로 민중소외와 억압구조로서의 분단자본주의·종속자본주의라는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모순구조를 조망하였다. 특히 이들 경제평론 중에서 민중소외와 민족주체성의 측면뿐 아니라 환경오염, 열악한 사회복지, 자원고갈의 차원에서 한국 경제개발정책을 비판하는 것들은 현재의 시점에서 봐도 의미가 있다. 논

8) 현대 자본주의는 동시대의 세계자본주의 체제 혹은 냉전질서하의 구체적인 개별자본주의 형태로 존재하고, 이것은 복지국가형, 자유주의형, 동아시아형 등으로 유형화해볼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은 순수자본주의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있다기보다는 동아시아형과 더불어 조속한 독점, 국가개입주의, 낮은 사회복지가 결합된 전형적인 냉전자본주의로서 미국형과 근접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자에 따라 편차는 있었으나, 이들은 민족을 추상적 실체로 보기보다는 그 실질적 주체는 민중이라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시기나 해방정국 당시의 저항적 민족주의의 흐름을 나름대로 계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분단시대’라는 개념에는 분단이라는 외적 규정력과 공업화에 따른 국내의 자본주의적 사회변동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가 불투명하였고, 자립적인 경제구조를 갖는 민족단위 통일국가상이 어느 정도는 ‘당위’로서 전제되어 있었다.⁹⁾ 따라서 내포적 성장전략(박헌채·이청산), 경제적 이중구조의 극복(이경의), 주체성을 침해하지 않는 외자도입(신용하) 이상의 구체적 대안전략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당시의 대중사회론 및 농촌현실과 여성문제에 관한 좌담 등 공업화 이후 변화된 사회현실과 관련된 쟁점들이 분단 등 정치적 조건 혹은 역사적 전개과정과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지가 좀더 분명하게 정리되었다라면 80년대 이후의 논쟁에 더 중요한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 가능성이 아직 불투명하고 제3세계에서 민족민주혁명의 파도가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은 당시의 시점에서 지식인들이 암암리에 ‘비자본주의적 발전의 길’ ‘민족혁명의 길’에 기대를 갖고 중국혁명의 모델에 관심을 갖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생각된다. 즉 이 시기의 지적 성과에 대해 우리는 과학성이라는 잣대로 폄하하기보다는 군사정권의 이데올로기를 허문 것에 더 많은 점수를 주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¹⁰⁾ 80년대 초·중반기 한국은 정치적으로는 암흑기였지만 외형상의 경제적 지표는 크게 변했다. 한국은 70년대말의 위기를 어느정도 벗어나서 과감한 산업구조조정, 경제개방과 자유화 정책을 통해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루게 된다. 당시 한국자본주의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했지만 한국을 남미국가들과 같은 반열에 놓기는 어렵다는 느낌이 확산되었다. 대외적으로는 북한

9) 『창비』 76년 봄호에서 95년 봄호에 이르는 강만길교수의 주장들을 참고할 것.

10) 세계체제론은 이론이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주류사회과학에 대한 ‘비판’이었다는 윌러스틴의 말을 연상해보라. 이 점에서 80년대의 과학론이 70년대의 지성 특히 한국경제에 대한 분석들을 소부르조아적이라고 비판한 것은 사물의 한 측면만 바라본 것이며, 이러한 편협한 해석에서 90년대 이후 과학론의 급격한 후퇴는 어느정도 예고되었다고 생각한다.

과의 경제력 격차가 아주 현격하게 드러나면서, 외국의 연구자들은 이제 한국 등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가의 발전 모델에 더욱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자본주의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분단과 한국자본주의를 어떻게 관련지을 것인가 하는 논쟁이 촉발되기에 이른다. 따라서 한국자본주의 혹은 사회구성체를 그 현상형태에 주목하여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과 그 구체적인 내용과 파행성을 주목하면서 주변부자본주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다가 급기야는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론과 식민지반봉건(자본주의)론으로 분해되기에 이른다.

내부의 다양한 편차는 있지만 80년대 이후 한국사회성격 논쟁의 축은 이제 남한사회를 자본주의적 재생산관계와 계급모순을 중심으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규정하는 제국주의의 지배와 민족분단을 중심으로 볼 것인가 하는 논점으로 이분화된다. 70년대의 민족·민중론의 연장선에 있으면서 이러한 분해구도의 출발점을 이루는 사람이 박헌채라고 할 수 있다. 민족경제론과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결합 가능성, 자주·민주·통일의 일체성 및 민중민주노선(PD)과 민족해방과 민족통일노선(NL)의 결합적 사고를 그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가 민족경제론의 사고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서도 이미 한국자본주의의 국가독점적 형태로의 발전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¹¹⁾ 이러한 태도는 그가 한국에서 구식민지적 과제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론상의 애매한 점은 좀더 보편주의적인 문제설정 하에서 한국자본주의의 독점성과 종속성을 결합시키려는 후배 정치경제학자들의 비판에 직면했고,¹²⁾ 반대로 분단현실을 단순히 구식민지적 민족문제의 틀에서 보지 않으려는 백낙청교수와의 인식의 편차를 보이기 시작한다.

11) 정윤형은 민족경제론을 하나의 과도기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정윤형, 「민족경제론의 역사적 전개」, 박헌채선생화갑기념논문집 『민족경제론과 한국경제』, 창작과비평사 1995.

12) 정성진, 「민족경제론의 체문제」, 『산업사회연구』 제1집, 1986 및 이병천·윤소영의 앞의 글 참조.

한편 남한 내에 자본주의적 사회관계가 본격적으로 정착되는 80년대 중반 들어 구식민지적 민족해방의 논리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역설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한국현대사의 단절성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그러나 사회과학자들 중에서 이러한 입장을 고집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북한의 경제적·정치적·도덕적 우위를 더이상 인정할 수 없게 되고, 통일 역시 점차 남한사회의 민주화 차원으로 그 성격에 변화해간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회과학자들의 논쟁구도는 한국을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중진 자본주의 더 나아가 선진자본주의의 문턱에 다다른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로 볼 것인가 하는 점으로 급속히 이행하였다.

80년대말 이후 맑스이론 및 여타 서구 사회과학이론으로 훈련된 후배세대 사회과학자들은 민족문제 혹은 분단문제를 독자적인 변수로 설정하는 데 거부감을 느끼면서 오히려 국가의 성격이나 민주화 문제에 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88년 이후 한국의 높은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선진국화, 소비패턴의 변화 등 가시적인 사회변화나 현존 사회주의의 붕괴와 사회운동의 퇴조 앞에서 이제는 신식민지국가독점 자본주의론을 '신봉'하던 대다수의 사회과학자들이 '전향'하고 한국자본주의의 성공을 인정하자는 쪽으로 논의의 축이 급격히 이동하면서 한국사회구성체 논의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창비』는 이러한 논의과정에 분명한 입장을 갖고서 개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백낙청교수가 이러한 '신판 근대화론'의 파도에 맞서서 지속적인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흥미롭다.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world-system theory)이 유통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 일국내의 계급관계를 경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80년대 초반 무렵에 오히려 백낙청교수는 한국사회 및 한국의 분단을 세계체제적 시야에서 보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의 문제를 특수주의적인 시각에서 보기보다는 보편과 특수 결합의 한 양태로서 보자는 제안은 종속이론의 한계를 극복했다고 자부하던 민족중심적 노선(NL노선)과 '전도된' 민족(일국)중심주의(PD노선) 모두로부터 과거 제3세계론의 연장에 불과한 것으로 비쳐지면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필자는 이것이

한국의 이론가들이 목전의 실천적인 과제에 압도당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제대로 실천적이지 않았’던 데 기인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한국 전쟁, 한국의 공업화나 10월유신, 광주민주화운동 등 한국의 정치·사회운동의 전개과정과 그 인과관계에 대해 좀더 깊이 사고하는 지식인이었다면 당연히 세계체제, 국제정치적 역학관계, 분단의 역사적 성격 등을 어떻게 자본주의화된 한국사회 구조와 과학적으로 결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성급하게 양극단적 입장으로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백교수가 이미 1987년 좌담에서 동아시아 ‘부분국가’에서의 정치적 종속과 비약적 경제성장이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은 대단히 돋보이는 점이였다.¹³⁾ 그의 이러한 논지는 중진자본주의론의 일국주의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자리에서도 반복된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분단체제론으로 연결시킨다. 그는 분단현실을 분단시대라는 역사인식이나 민족모순의 틀로 해소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에서, 그리고 한국사회는 분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되기보다는 세계체제의 일부로서 분단체제와 그것에 의해 조성된 다양한 세력관계와 매개변수들에 의해 이중삼중으로 복합적으로 규정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그러한 개념을 제기한다. 분단체제라는 개념은 분단에 따른 양 국가에서의 기득권층 형성 및 70년대 한국의 공업화와 계급분화, 내부에서의 통일억제세력이 형성되고 있다는 남북한 사회변화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백교수는 한반도 문제 그리고 남북한 사회와 남북한 민중이 처한 사회현실이 자본주의 혹은 사회주의라는 경제체제나 미국에의 정치·군사적 종속에 일방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냉전질서와 그것에 의해 형성된 남북한 ‘국가’와 지배집단의 독특한 상호의존구조

13) 이미 커밍스나 해거드 등이 80년대 중반에 한국·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의 비약적 경제발전과 미국의 영향력, 냉전질서와의 상관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Bruce Cumings,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Northeast Asian Political Econom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8, No. 1, 1984; Stephen Haggard, “The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World Politics*, Vol. 38 No. 2, Jan. 1986 참조.

에 좌우된다고 본다. 그의 분단체제론은 남북한 지배층의 암묵적 결탁과 미국·일본 등 주변강대국의 현상유지적 이해관계 아래의 남북한 민중들의 고통이라는 모순관계로 설명되지만, 오히려 분단현상을 거시 역사적으로 보면서 남북한과 주변국의 정치적 대립구조와 그 타개 방안을 장기적이고 단계론적으로 그리고 현실주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듯하다. 이러한 주장은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개념적으로 애매하다는 점(손호철·정대화), 현실성이 없다는 점(이종오) 때문에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사회과학자들과의 이러한 논란은 공동체주의와 시장주의의 긴장, 역사적·인문학적 시각과 사회·과학적 논리의 상호 이해부족으로 느껴진다. 따라서 ‘사회’와 ‘민족’이 불일치하게 된 우리의 독특한 조건이 사회 즉 국가에 어떠한 특성을 부여하는가를 분명히 정리할 때 이러한 이해부족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이다.

결국 『창비』는 분단 혹은 제3세계적인 지평에서 한국사회를 바라보다가,¹⁴⁾ 80년대 이후에는 세계체제·분단체제 내의 한 사회구성체로서 바라본다. 필자는 분단체제라는 개념이 성립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지만,¹⁵⁾ 장기적인 역사발전 즉 서구적 물질문명의 초극을 통한 진정한 인간해방이라는 시야에서 볼 때, 그것이 주장하는 바를 깊이 음미해보며 좀더 체계적으로 재정립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4) 백낙청교수의 창간 10주년 기념좌담회 석상의 발언(76년 봄), 「제3세계와 민중문학」(79년 가을), 「4·19의 역사적 의의와 현재성」(80년 여름)에서 제기한 제3세계론적 문제의식을 참조할 것.

15) 필자는 분단이 60년대 이전의 구식민지적 성격에서 7, 80년대의 과도기(이 시기가 백교수의 분단체제론에 가장 근접한 시대라고 생각한다)에서 80년대 후반 이후의 독일형으로의 근접기로 변해왔다고 생각한다. 백교수의 문제의식을 계승하여 분단체제 개념을 과학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정치권력의 기본 속성을 정리하고 기든스가 한번 정리한 바 있는(Anthony Giddens, "Nation-states in Global State System," *The Nation State and Violenc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열국체제(inter-state system) 하에서 패권국가와의 공간적·역사적 관계를 통해 한반도의 대립구조의 세계체제적 성격을 일단 정리하고, 한국자본주의의 변화 및 지배집단 내에서의 자본과 정부의 갈등, 북한사회의 역사적·구조적 파악 및 체제정당화 기반의 변화 등을 추적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변혁운동의 노선정립 문제

앞서 정리한 것처럼 70년대말까지 한국의 비판적 사회과학 진영은——구체화되지는 않았으나——민족민중적 변혁을 지향하였다. 그리고 『창비』는 사회과학 잡지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서 그러한 입장을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80년 ‘민주화의 봄’ 당시 『창비』 권두언에서 민주화에 대한 낙관을 경계하면서 ‘민중에 바탕을 둔 민주화’ ‘분단극복을 염두에 둔 민주사회의 건설’ ‘외세(우방)에 의존하지 않는 민주화’의 노선을 분명히한 것은, 분단현실과 국내 정치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하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지식인들의 성급한 기대에 췌기를 박은 중요한 지적이었다. 그후 1985년의 사회구성체 논쟁과 1987년의 권두좌담, 1988년 가을호와 1989년 가을호의 권두좌담에서 한국의 변혁운동에 대한 본격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이 이루어진다.

80년대 후반 이후 한국 사회변혁운동의 주된 쟁점은 초기에는 민주화운동·민중운동·통일운동의 배치 혹은 민주화운동의 구체적 내용과 목표에 관한 것이었고, 90년대 들어서서는 노동운동 등 이른바 구사회운동과 여성·환경운동 등 이른바 신사회운동의 결합 가능성과 이에 대한 모색으로 집약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1987년에서 89년에 이르는 격동기에 우리 사회과학계는 한국사회구성체에 대한 시각과 그것에 입각한 사회운동 노선을 모색하는 데 커다란 입장의 차이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단순화한다면 민족모순을 주모순으로 보고 계급모순을 부차적 모순으로 보는 70년대말 이래의 ‘전통적 시각’의 계급연합적인 민주화우선론과 계급모순을 중심으로 보고 민족모순을 부차적으로 보는 계급중심적 시각의 노동운동 헤게모니론, 그리고 민족모순을 주모순으로 보는 시각의 반외세자주화 및 통일운동 우선론으로 크게 분열되었다.

그러나 구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의 상징으로 찬양되기도 했던 북한이 휴전선 너머 남한의 동족에게는 화해할 수 없는 반국가집단, ‘금단의

땅'으로서 지척에 현존해왔으며, 그것의 존재와 역사 자체가 남한 지식인들의 정신세계 전체를 옥죄면서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감안하지 않고서는 한국의 변혁운동 노선은 물론 지식인의 사고와 행동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존재야말로 왜 남한에 건강한 자유주의가 존재할 수 없는지, 왜 온전한 사회과학이 존재하기 어려운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압도적 현실(paramount reality)이다. 80년대 한국 사회과학계의 변혁논쟁이 북한을 '천국'으로 받아들이려는 발본적인 반체제 노선(NL)과 그것을 철저히 비판하려다보니 담화는 급진적이지만 실천적으로는 남한사회를 집착 인정하게 되는 체제통합적인 노선(PD)으로 기형적으로 균열된 것도 이러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민족주의의 끈질긴 망령과 분단이라는 끈적거리는 현실로부터 벗어나 고자 하는 '서구주의자'의 외침은 일견 정당한 것이지만, 그것은 한국 판 '슬라브주의'의 '깊은 뜻'을 완전히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하여 개종시키는 데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

문예지의 성격을 갖는 『창비』의 한국 변혁운동에 대한 대응은 매우 조심스럽다. 백낙청교수로 대변되는 『창비』 측의 입장은 초기단계에는 노동운동 해체모니론과 통일운동 우선론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제기 형태로서 맹아적으로 표현되다가 중진자본주의론/부르조아민주주의적 개혁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이후에는 이른바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운동의 흐름에 대해서도 약간의 거리를 두면서 접근한다. 대체로는 윌러스틴 등이 말하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반체제(anti-system)운동의 맥락에서¹⁶⁾ 민주화운동·인권운동·평화운동으로서 분단극복운동, 나아가 근대극복운동으로서 분단체제극복운동을 제안한다. 따라서 한국자본주의의 독자적 발전을 과대평가하는 직접적인 반자본주의운동이나 반대로 그것을 전통적인 민족문제의 틀에서만 보려는 통일운동, 나아가 한국자본주의의 질적인 변화와 탈근대사회로의 진입을 과대 해석하는 신사회운동론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한다.

16) Samir Amin, Giovanni Arrighi, Andre Gunder Frank, and Immanuel Wallerstein, *Transforming the Revolution: Social Movements and the World System*, Monthly Review Press 1990.

『창비』가 90년대 들어 사회과학계의 대세를 이루어가는 ‘신판 근대 화론’이 과연 변화된 세계지본주의와 한국이 처한 정치경제적 조건을 바르게 접근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일단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80년대말 90년대 초반의 전환기에 한국 사회과학계 전반이 그러했듯이 『창비』 역시 이론적 쟁점을 ‘이론’으로 대결하기보다는 전술적 필요를 강조하거나 몇가지 징후를 제시함으로써 답하기 때문에 우리 변혁론 논쟁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지적인 자극을 주는 데 별로 기여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¹⁷⁾ 예를 들자면 『창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민족개념과 관련해서도, 구식민지적 민족관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종족성(ethnicity)과 민족(nation)이 어떻게 특수하게 연결되는지, 분단국가 형성과 민족개념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세계질서 변화, 남한 내의 계층분화가 공동체로서의 ‘민족’을 어떻게 해체해나가는지에 대해 새롭게 쟁점을 제시하거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는 느낌을 준다.¹⁸⁾

『창비』가 분단체제 극복의 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는 과제에 대해서 여전히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 민중들의 고통, 제3세계 민중의 연대라는 ‘익숙한 공식’에 의존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입장들은 백교수 개인뿐만 아니라 『창비』가 갖는 장점이자 한계가 아닌가 싶다. 필자는 지식사회에 몸담은 70년대 이전 세대의 장점이자 한계는 바로 사회를 바라볼 때 시장논리의 우선성을 전제하기보다는 농촌사회의 정서적 유대와 인간의 공동체 지향성에 은연중 상당한 비중을 두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즉 열정이 이해관계(interest)를 압도할 수도 있다는 믿음은 그 자체로서 틀린 것은 아니고 한국의 맥락에서는 오히려 더 구체화해볼 과제일 터이지만, 남한의 조건에서 노동자가 노동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구체적인 계기들은 물론이고, 중간층의 소비구조에의 통합, 신세대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분단체제 극복의 사회적 동력을 찾아내기 어렵지

17) 당시 초미의 관심사였던 북한사회에 대한 『창비』의 노 코멘트에 대해서는 이미 문용식(91년 봄호)이 지적한 바 있다.

18) 여기서는 스미스(Smith), 겔너(Gellner) 등의 민족주의이론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않을까 생각된다.

이 점에서 볼 때 『창비』의 계급론 특집은 의의가 있는 것이기는 했으나 운동노선 모색의 차원에서 보면 따로 노는 기획이라는 인상을 준다. 만약 한국이 처한 세계체제 내적 조건 때문에 우리 사회가 서구자본주의와 같은 전통적인 계급분화와 계급형성의 경로를 거치지 않았다면 한국에서 노동자를 비롯한 운동주체의 정체성 형성(identity formation)의 기본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분단체제 극복의 동력형성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변혁운동관련 좌담이나 논문들을 배치했다라면 하는 생각도 든다. 이것이 정리되면 왜 한국의 80년대의 조건하에서도 노동자계급 ‘메시아주의’가 반드시 적절한 인식은 아니었으며, 90년대 이후의 운동주체 이론론(신사회운동론) 역시 성급한 판단인가를 역사사회과학적 맥락에서 동시에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¹⁹⁾

전반적으로 변혁운동에 대한 『창비』의 노선은 세계체제론의 도움으로 좀더 세련되기는 했으나 70년대말, 80년대초의 민중민족주의에서 크게 벗어난 것 같지는 않다. 지나치게 시류에 편승할 필요는 없지만, 변화한 사회질서를 개념화하면서 90년대 후반 혹은 21세기적 인간해방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노선을 본격적으로 천착해야 할 것 같다.

(3) 동아시아 정세변화, ‘세계화’ 혹은 ‘근대’의 문제

현존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결국 그것이 자본주의 극복의 대안이었다 기보다는 근대로 가는 도정상의 하나의 실패한 실험이었으며 중국·북한 사회주의라는 것도 결국은 전근대의 잔재를 강하게 안고 있는 근대적 기획에 불과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한국자본주의 발전과 그 현재적 상황을 좀더 역사적인 맥락에서 접근해볼 필요성이 제기되

19) 이것은 사실 필자의 주된 이론적 관심이었다. 70년대말 학부생 시절에 투렌느(Touraine)의 1968년 이후 유럽의 이른바 신사회운동론을 읽으면서 필자는 당혹감을 느낀 적이 있다. “한국에서 유례없이 활발한 학생운동은 유럽의 후기자본주의 현상의 일환이라는 말인가”가 당시의 느낌이었다. 이러한 질문은 필자의 최근 저서 『한국사회 노동자 연구』(역사비평사 1995)에 이르기까지 유지되어왔다.

었다. 이것은 사회문화적 영역에서의 포스트모던한 여러 징후들과 자본의 국제화, 전지구적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과연 민족·계급의 개념이 여전히 유효한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으로 연결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동아시아에 대한 서구의 관심의 증대와 더불어 전근대적인 것으로 비판되던 것이 오히려 탈근대적 사회질서의 자산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점쳐지는 분위기가 형성됨으로써 도대체 계몽적 이성, 합리성, 진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중에서 사회과학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민족국가 혹은 민족주의가 변화된 질서 아래서도 여전히 생존근거를 갖고 있는가, 전파월경과 지구정보화의 질서 속에서 국가·민족 단위의 문화가 성립할 수 있는가, 일국 내 계급관계는 어떻게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가 하는 점들일 것이다. 국내 학계에서는 세계화를 국가간의 패권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것으로 보면서 이에 대한 민족주체적 대응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자본의 세계화, 곧 자본주의적 모순의 본격화·전면화로 보는 시각과 그 반대편에서 이 변화를 ‘국경없는 세계’ ‘지구촌의 형성’으로 보는 시각 등 다양한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있다.

백낙청·최원식 교수 등의 생각과 『창비』에서 즐겨 번역한 외국 논객들의 목소리를 통해 짐작해보면 『창비』는 이 문제를 세계체제론의 연장에서 역사적 자본주의의 흐름의 일환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 즉 자본주의 세계체제 및 군사정치적 패권구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민족국가의 위상과 의미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는 않았다는 것들이 그것이다. 특히 『창비』는 동아시아 현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즉 동아시아의 경제적 성공이라는 것도 냉전질서의 침병으로서 권위주의적 정권과 미국·일본 자본주의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체제비교론적 우월성에 안주하기보다는 그것의 구조적·세계사적 한계를 동시에 보자고 제의한다. 세계체제의 위기 및 대안적 운동의 기반에 대해서 별로 언급되지 않는 점은 여전히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근대를 바라보는 데서도 그것을 일단 세계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 시대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국단위에서는 근대에서 탈근대로 단계론적으로 진전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의 조건에서 볼 때 민

죽국가 형성이라는 근대의 과제가 분단이 지나치게 오래 지속됨으로써 21세기적 혹은 탈근대적 과제와 중첩되기에 이르렀고, 따라서 분단체제 극복을 근대극복의 과제 속에서 접근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는 좀더 발본적으로 반근대주의의 입장을 취하지 못한다는 비판(윤소영), 그 반대편에서 탈근대적 여러 징후들을 위치설 정해야 할 필요성(김호기)이 제기되기는 했으나 이들 비판 역시 새로운 역사해석과 미래전망으로 연결되지는 못한 것 같다. 이 점에서 최원식 교수의 동아시아적 조건에 대한 성찰은 매우 흥미있는데, 앞으로 좀더 체계화된 작업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해봄직하다.

이 문제와 관련지어 볼 때 『창비』의 좌담이나 논문들이 북한과 사회주의의 전근대적 측면을 한국자본주의의 독특한 전근대/근대 결합의 성격과 결부시켜서 논의하거나 그것을 일본·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이행과 비교하면서 조명하지 않는 점에 대해 약간 아쉬움을 느꼈다. 이것은 21세기 통일 한국의 사회모델 설정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되는데, 한국의 정치구조나 기업구조의 가족주의적 성격을 단지 전근대의 유물로서가 아니라 한국 식의 독특한 근대의 모습으로 보면서, 그 모순을 극복할 대안과 전략을 찾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점은 현재 진행중이므로 『창비』의 앞으로의 대응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지난 20세기 근대의 역사는 홉스봄(E. Hobsbaum)이 말하는 극단의 시대(The Age of Extremes)의 ‘극단’에 이르는 진폭의 과정을 거쳤다. 식민화, 제국주의 전쟁, 범세계적 냉전체제가 한반도의 골짜기와 외진 섬마을을 피로 물들이는 처절한 역사적 경험을 거친 우리는 지난 역사를 세계사적인 맥락에서 위치지으면서 좀더 성찰적인 자세를 갖고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하리라 본다. 우리는 피해자로서의 자의식이나 특수성에 대한 과도한 강조에서 벗어나 이제 스스로의 눈으로 과거를 되돌아보고 그것을 통해 주체적으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을 가질 때가 되었다. 특히 한국의 사회과학이 긴 호흡을 갖고서 이 문제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역시 문학과 역사로부터 여러

가지 감각을 배워야 하리라 생각되고, 이 점에서 우리는 『창비』의 향후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4. 앞으로의 전망

우리는 봉건적 지성에서 근대적 지성으로 이행하는 기간 동안 민족사적으로 불행한 경험을 겪으면서 지적·사상적 중심을 세우지 못했다. 비록 한계가 있었지만 조선조 이전 시대 우리의 지성은 동시대의 세계, 즉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내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을 자랑하였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식민지 시기 이후 우리의 지식사회는 낡은 것을 전적으로 부정하면서 새로운 것을 그냥 학습하기에 바빴고, 그러다 보니 새로운 근대사상 즉 자유주의 사상이나 사회주의 사상을 나름대로 소화하여 우리 것으로 토착화하고 나아가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여유를 갖지 못했으며 이렇다할 학문적 업적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중에서도 인문학보다는 사회과학의 경우가 더욱 참담하다. 역사학·문학·철학은 비록 굴절이 있기는 했으나 일제시대 이래 더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시대 이래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어서 나름대로 역사와 고민의 축적이 있다. 그러나 수입학문으로서 사회과학은 애초부터 참여한 정치적 갈등의 와중에서 체제옹호와 체제비판의 이데올로기로 극단화되었고, 사회과학적 문제의식과 학문적 소양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연구활동보다는 현실에 직접 개입하는 운동가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조건에서 사회 전체의 지적 능력은 대학보다는 대학 외의 공간 특히 사회운동이 담당하게 되었다. 60년대 이후 한국 사회과학의 이만큼의 성과도 수많은 청년·학생들의 피와 희생에 크게 힘입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분단 이후 우리 사회의 지적인 역량, 사회과학적 인식능력도 다분히 대학의 강의보다는 비제도적 지식인 씨쿨과 스스로를 운동체로 자임하는 잡지들이 수행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반드시 잡지가 대중적이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즉 잡지들이 본격 학술지보다 높은 지적 수준과 치열한 문제의식이 담긴 글들을 전달해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70년대의 『창비』의 사회과학 지면은 80년대말 복간 이후의 『창비』에 비해 이론적으로는 덜 세련되었을지 모르나, 사회발전에 미치는 역할은 더욱 컸다고 생각된다.

『창비』는 90년대 이후 들어서도 좌담, 논문, 외국논문 번역 등을 통해 특유의 계몽적 역할을 계속 수행하였다. 그러나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의 범위에 비해 그것을 소화하여 정리할 수 있는 국내의 필진은 취약했기 때문에 더욱더 번역논문에 의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번역논문을 신게 된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당장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90년대 이후 사회과학계와 운동진영에 대한 『창비』의 기여를 더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나 하는 느낌도 있다. 사실 『창비』의 사상적 입장을 세우는 데 기여한 박현채·리영희·강만길·백낙청 교수 등은 초기 『창비』의 무게를 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뒤를 이어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전시키고 『창비』의 입장을 구체화하는 목소리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언제나 사회과학자들에게 불만과 답답함을 느끼는 백낙청교수가 자주 ‘출연’하게 되고, 그 결과 논의의 새로운 진전과 새로운 문제제기를 기대하는 독자들에게는 따분함을 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앞으로도 『창비』의 사회과학 지면이 학생·문인·지식인 들과 사회과학자 모두에게 많은 자극을 주고 또 사상적 지평의 확대에 기여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 현재로서는 쉽사리 낙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예상되는 학문사회 내외의 몇가지 조건변화와 학계의 대응과 역량축적 여부, 『창비』쪽의 독자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 향후의 행보와 발전 가능성이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지식사회 외부의 변화에 대해 생각해본다. 우선 한국의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지식의 생산과 유통의 체계도 크게 바뀌었다는 점을 생각해야겠다. 영상매체와 컴퓨터의 보급 등으로 인해 문자매체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낮아졌고, 전반적으로 종합적이고 추상적인 지식

보다는 실용적이고 가공된 지식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적이고 비판적인 지식인보다는 경험분석적인 학자, 실무 전문가의 입지가 눈에 띄게 넓어졌다.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정보, 인적 자원, 현실감각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대학 및 자유로운 지식인 집단의 위상은 저하되었다. 한편 사회운동의 약화와 부분적인 제도화에 따라 독립적인 지식인들이 대학에 몸담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은 크게 협소해졌다. 대학에 몸담은 학자나 학자 지망생들도 업적 관리에 필요한 엄격한 학술논문 작성에 주로 관심을 기울이면서 점차 대학 밖의 변화되는 현실에 대해 해석하고 비평하는 작업에는 별로 매력을 느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종합적 지성, 전체적 전망을 소중히 여기는 독자와 필자 모두를 확보하는 문제에 더욱 부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른 모든 한국의 잡지가 그러하듯이 『창비』 역시 영국의 『뉴레프트 리뷰』(*New Left Review*)의 앤더슨(P. Anderson)이나 네언(T. Nairn) 같은 대변인들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는데, 그것은 한국사회의 문화적 토양이나 물질 기반은 물론이고 대학이라는 제도가 비판능력을 갖춘 종합적 지성을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80년대라는 짧은 이례적인 시기를 예외로 본다면 우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필요한 지식을 미국이나 유럽의 대학이 육성한 인사들을 통해 수입해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있다. 그러나 비교적 탄탄한 지적 훈련을 거친 이들이 우선 학문사회 내의 요구에만 관심을 갖는 인자로 정착하게 될 경우 상상력과 창의력, 실천적 열정과 종합적 판단능력을 갖는 지식인은 발견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주지하듯이 국내의 현실에 좀더 깊이 개입했던 사람들은 지적인 재충전을 하지 못하고 버티는 것도 어려워져서 점차 이론적 생산능력을 상실하고 결과적으로 지식사회에서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70년대말 80년대초 격렬한 이념적·사회적 갈등을 겪으면서 국내에서 부대끼며 연구하며 살아왔거나,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고서 해외에서 훈련받고 돌아온 세대의 향후의 정치사회적 성장, 제도적 교두보 확보, 문화적 정체성 확립의 문제와도 관련된다고 보는데, 이 세대들이

자코비(R. Jacoby)가 말한 것처럼 실종된 세대(missing generation)가 되어버릴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체험과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대안적 지성으로 자리잡을 것인지에 따라 한국 사회과학의 향후 진로 및 『창비』와 같은 잡지의 지속적인 생존이 크게 좌우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모든 이슈를 쉽게 정치화하고 전체적인 것으로 만드는 한국의 독특한 ‘소용돌이 정치’(politics of the vortex)가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고, 지난 시기 비극적인 역사적 경험에서 누적된 억압과 소외의 구조가 존재하고 있으며, 지식인 우대의 문화가 허위이침에 없어질 것 같지 않으며, 통일문제 등 커다란 국가적·사회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사회 전체적인 지식축적량이 적기 때문에 종합적·비판적 지성의 기능이 곧바로 실용적·기술적 지식으로 대신될 것 같지는 않다.

한편 지식사회 내부로 눈을 돌려보면 무엇보다도 사회과학자들의 지적인 용기와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들은 우선 현시대의 주류를 형성해가는 신관 근대화론, 신자유주의이론, 세계화론, 포스트모더니즘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윌러스틴이 말하는 ‘기술발전으로서의 근대’와 ‘해방으로서의 근대’의 긴장을 어떻게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응답하면서 변화된 사회현상을 해석하는 작업을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앞서서도 강조했다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의 사회과학자들은 역사학자와 국제정치학자들로부터 많은 자료와 상상력을 제공받아야 할 처지에 있다. 60년대 중반 이후 30여년의 기간이 지난 지금에도 역사학과 사회과학(정치학·경제학·사회학)은 거의 따로 놀고 있다. 매우 비극적인 역사적 경험을 거친 한국에서, 그리고 어느 나라보다도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로부터 심대한 영향을 받은 한국에서 지식인들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흡수하여 자신의 시야를 넓히기보다는 오히려 아주 세분화된 전공영역의 테두리에 안주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매우 역설적인데, 그것은 대학이라는 제도의 체제통합 효과가 이들에게도 여지없이 관철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요즘 한국에서의 철학·사상 관계 서적의 특수(特需), 프랑스 철학에 대한 유례없는 관심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전세계적으로 지

적·사상적 혼돈상태가 전개되는 마당에 철학적인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역사학이나 사회과학의 토대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더욱 증폭되었다고 본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상적 원칙이나 방법론이 구체적인 분석과 해석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철학 특수는 일종의 병리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과학의 철학화 경향은 역시 ‘혼이 없는’ 경험주의적 분석보다는 실천적 문제의식이 깔린 현실해석으로 대신해야 할 것 같다. 다른 한편으로 그동안 타성적으로 사용해온 국가·시민·계급·자본주의·근대 등의 개념을 철저한 맥락 대조를 통해서 주체적으로 재해석하고 재정의하는 작업을 거쳐 이러한 문제점이 극복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결국 우리 ‘사회’과학의 활로 역시 현실사회와의 끊임없는 접촉을 확보함으로써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생각인데, 이 점에서 70, 80년대 국내 사회과학운동의 경험 중에는 버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더 심화·발전시킬 요소들이 많다고 생각된다. 바로 이 점에서 『창비』의 많은 역할이 기대된다. 『창비』의 사회과학 지면은 사회과학에 대한 인문학계의 충고로서 계속 존재하면서 사회과학의 형식화·왜소화를 막는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창비』의 사회과학 지면이 여전히 민족사의 관점에서만 우리의 문제를 보는 데 익숙해 있는 문인들이나 국문학도, 국사학도들에게는 보편적 시각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민족’이라는 개념을 실체로서 느끼지 못하고 국가단위의 사회관계 모델에 집착하는 사회과학도들에게는 역사·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높임으로써 통일 이후 새로운 사회건설의 문화적·도덕적 기초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창비』가 이러한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더욱 종합적인 지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지로서 역할을 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문화적 역량은 높아질 것이고 『창비』의 지성사적 위상 역시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